

“榮山湖 회생대책 있는가”

保社·經科委, 光州환경지청 全南道감사

原電건설은「목수거건 도박」

麗川工團 오염방지책 추궁

地自制대비 災害保險 실시 촉구



국회보사위와 경과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지청에서 지방감사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경지청에서 감사를 시작한 보사위(위원장·辛相佑의원)는 영산강과 영산호 수질개선에 대해 麗川공단으로부터 麗川原電과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전국에

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영산강수질오염방지책과 영산강의 상류인 麗川의 정화대책·영산호를 살리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전국에 5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면서 全南에만 30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이유와 집

결과 건강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麗川공단 주변의 산 림도량이 일반토지에 비해 무수한 배까지 높을 것으로 드려나 불로 토양오염이 심각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朴英淑의원(平民)은 『목수거건과 오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 방사능 누출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걸고도 바를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토환경의 보전위하여 청정원은 원자력 건설반대운동에 앞장설 용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李喆鎔·鄭基榮의원들은 南海화력이 환경관리공해 방지책에 15억원의 국민투자기금을 요청 받았으면서도 오일이 줄고 있지 않으니 이유를 따졌다.

金忠光의원(平民)은 『南海화력의 공해방지행위에 대한 무기한 조업금지 시사방안이 5일 전후기간조업금지행정처분으로 둔갑한 경위부터

20일 光州환경지청에서 열린 국회보사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영산강 수질오염대책 원전 주민 보호문제를 집중 의결했다

한고 『全南도가 자체제를 실시할 경우 재해보전을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全南도청 감사에 나선 경과위(위원장·柳俊相)의원들은 大佛공단의 업체유치계획·지자체심사에 대한 재정자립 노력, 수해민들 할부복구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柳俊相의원(平民)은 『지난번 수해로 상용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

하고 『全南도가 자체제를 실시할 경우 재해보전을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許萬基의원(平民)은 『木浦지역 大佛공단의 업체유치계획·유지전망 및 문제점, 중앙정부의 지원유무사항을 밝혀달라』고 말했다.